

## 기획 논문

#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동학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김주환 \_ 동국대학교

### 논문요약

연대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체계의 기능 맥락과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규범 맥락 사이의 충돌과 긴장 속에서 실천된다.

이 글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와 같은 두 맥락들 사이의 역동적 길항관계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 맥락은 경제의 체계논리, 신자유주의 탈복지국가 시대 국가의 리스크 관리와 복지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 논리 안으로 흡수·종속될 가능성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또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이에 맞서 사회적 경제를 재의미화하고, 복지를 사회적 경제에 전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저항하며, 사회적 경제를 정치적인 것의 영역과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 맥락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 맥락에만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자명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거나, 그것의 기능 맥락에만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체계의 기능적 보완물로만 보는 비판론을 넘어, 두 맥락들이 결합하면서 그려내는 사회적 경제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사회적 경제, 연대, 민주주의, 규범, 기능.

## 1. 서론

경쟁과 차가운 이윤 논리가 시장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 영역을 조직하는 규제적 원리가 되면서 빈곤과 실업 같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연대와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국가는 연대의 제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나 여타 사회보장정책들을 통해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응해왔었으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광풍 속에서, 국가는 오히려 복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거나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 영역의 민영화 경향이 시사하듯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침식하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2013)는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은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체계 전반의 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시장논리의 과도화와 그로 인해 시장이 야기한 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 오히려 국가는 자신의 전통적

역할을 시장에 맡기려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공공성의 약화와 사회 불평등의 심화에 의해 연대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단지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일정 정도 사회적 경제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능적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시장 논리에 의해 침식되어온 연대성의 회복과 시민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복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규범적 기대 역시 오늘날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이다.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전개에 결부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기능적 기대의 맥락과 규범적 기대의 맥락이 서로 통약 가능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차원들이 아니라, 각자가 질적으로 상이한 자체 작동 논리를 가지는 별도의 것들로서,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기능적 기대의 맥락과 규범적 기대의 맥락 사이의 긴장은 단지 인식론적 범주 차이와 그로 인한 논리적 긴장에 머물지 않는다. 두 맥락 사이의 긴장이 현실화될 때에는 현실의 구체적인 힘 관계라는 정치적인 것의 차원을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연대와 민주주의에 갖든 규범적 기대의 맥락보다는 체제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기능적 보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있다.<sup>1)</sup> 이와 달리 국가의 주요 파트너로서 사회적

1)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의 실질적 운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체제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기능적 보완 역할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통해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시민들의 힘을 통해 시장과 국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에 있다(엄형식 2008; 장원봉 2007). 그 때문에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힘 관계와 관심의 차이의 차원이 사회적 경제의 현실적 실천 메커니즘을 관통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과정은 기층에서 실천되고 논의되던 사회적 경제 육성 요구를 국가가 흡수하여, 이를 여러 법적, 제도적, 경제적 지원 체계를 통해 국가 주도로 제도화하고, 여기에 기층 시민운동조직들과 활동가들이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 결합하여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 운영의 책임을 맡는 형태를 취해왔다. 한국 정치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

---

사회 전반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2006)의 “비전 2030” 계획에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육성의 필요성을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사회 투자의 일환으로 위치시켜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2005)는 실업률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 계층 간 빈부 격차 심화, 범죄, 자살 등 사회병리현상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고용노동부(2010)는 양극화 확대에 따른 사회 갈등의 증폭과 그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한 그 외의 다양한 사회갈등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의 필요성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문서들은 국가가 통치 리스크에 대한 기능적 관리라는 관심에서 사회적 경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 오랫동안 적대적 긴장관계를 맺어왔던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2000년대 중후반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 육성 과정을 통해 일정한 타협과 파트너십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이문국 2009). 사회적 경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국가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타협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가 양쪽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고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양쪽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동일한 성격의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자신의 기능적 기대를 투사했다면,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그것에 규범적 기대를 투사한 것이다. 그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기능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 국가권력의 관심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관심이 서로 충돌하고 투쟁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과정이 전개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흔히 사회적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파트너십’, ‘협치’, 관할 영역 분점을 통한 ‘협력적 혼합통치’(임혁백 외 2007, 6-7) 같은 표현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관심과 기대 맥락의 질적인 차이와 양자의 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투쟁과 갈등의 긴장을 포착하기 힘든 표현들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국가 주도로 육성되고 있는 저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에 투사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규범적 기대 맥락은 구조적으로 국가의 기능적 기대 맥락 안으로 흡수될 강한 경향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활동가들이 애초에 중점을 두었던 규범적 기

대들이 체제 내부의 기능 논리로 흡수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운동 진영 사이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국가의 기능적 기대에 정향된 사회적 경제 실천의 요구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전략과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의미와 실천 동학을 해석적으로 분석했다. 사회적 경제와 연대 및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경제의 핵심 작동원리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조화로운 연대의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유망한 전략으로 낙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적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기존 비판적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핵심 경제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않은 채 경제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풀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론적이고 선언적으로 전제하거나(서영표 2013; 김성구 2013; 한형식 2013), 지배담론이나 국가의 제도적 실천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가 통치 메커니즘 안으로 흡수되어 체제 유지의 기능적 보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김주환 2016; 2012; 김성윤 2013; 2011). 이러한 흐름들과 달리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현장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를 직접 파고들어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활동가들의 이해와 관련 실천들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여기에 작동하는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역

동적 삼투작용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 다음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서 3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실천에 대한 자기 이해의 서사 속에서, 특히 연대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심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를 살폈는데, 주민 개개인들의 삶의 필요 충족 욕구에 대한 관심과 현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제기되는 두 가지 주요 관심 맥락이었음을 확인했다. 4장에서는 삶의 필요 문제 해결이라는 관심에서 제기되는 연대와 민주주의가 규범적 이념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규범적 맥락이 거세되어 기능적으로 맥락화된 연대와 민주주의로 머물거나 환원될 구조적 위험성이 있음을 논의했다. 5장에서는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심에서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규범적 맥락에서 포착되는 연대와 민주주의 역시 신자유주의 통치의 기능 메커니즘 안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6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그것의 규범적 맥락이 거세된 채 기능적 맥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이에 저항해 어떻게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적 맥락을 복원하기 위한 실천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개입하는 국가와 시장의 권력과 자본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를 논의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서 규범적 이념으로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이상의 실현 가능성만을 특권화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사회적

경제에서 체제 유지 기능으로서의 연대와 민주주의의 역할에 배타적으로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신자유주의체제나 탈복지체제의 기능적 보완물로만 보는 출구 없는 비관론의 양자택일을 넘어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충돌과 긴장, 현실적 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력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긴장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연대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 2.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언어적 의미 세계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의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 6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각각 1~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유선을 통해 추가 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 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관련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실천의 양태와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활동가들을 선정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6인들 중 5명은 다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시민사회운동, 자활운동, 진보정당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경험했고 현재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각자의 영역이나 조직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다. 다만 6명의 인터뷰 대상 중 1명은 공동체에 기반을 둔 공정영화 상영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 실천을 하는 비교적 젊은 청년 세대로,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 여러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이나 사회적 경제 활동 경험이 짧았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에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1인은 아직은 젊은 청년 세대인 탓에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문화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로 채워져 있고 상대적으로 협소한 문화 관련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나름의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뷰 대상 6인에 대한 간단한 기초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 직책, 지역 거점, 나이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기로 한다.

인터뷰에서 초점을 두었던 것은 이들 활동가들이 현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및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직접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기초적 인적 정보

이름 (가명)	나이	성별	현재 주요 활동분야	과거 사회활동 분야	활동 지역
김수미	50대 초	여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여성·생태환경 문제	서울
나진철	40대 후	남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 지역 순환경제 조성	학생운동, 기출 청소년, 빈민, 홈 리스, 주거 문제	서울
장미영	40대 초	여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진보정당 활동, 대안 금융, 신용 불량자·채무자 문제	서울
박태식	40대 초	남	마을만들기, 공동체 경제, 협동 조합	학생운동, 진보정당 활동, 지역 운동, 지자체 선거 및 총선 출마	서울
조승철	50대 초	남	지역 사회적 경제 협의회, 활동 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 만들기	노점사·빈민운동, 진보정당 활 동, 지역운동, 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단	서울
이아름	20대 후	여	공정영화(공동체상영) 협동조합	장애인 봉사(독립영화, 예술영 화, 사회적 있는 영화 등을 개인 적 관심에서 공부하고 관련 문 화활동에 집중)	서울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자칫 인터뷰 참여자가 인터뷰 진행자가 듣기를 원하는 이른바 ‘정답’을 말하게 될 가능성을 피하는 동시에, 이들의 언어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이해되는 복합적 맥락들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나 자신들의 실천을 국가, 시장 그리고 정치적 투쟁의 차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활동가들의 진술들은 때로는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논리적 비약이 감행되기도 했으며,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

가 뒤섞이거나, 객관적 현실 인식과 규범적 기대나 개인적 열망 등이 뒤섞이는 등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대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의미 세계에 해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이 연구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연대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결부된 기능적 맥락과 규범적 맥락의 범주적 구분과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였다. 즉 기능적 맥락과 규범적 맥락이라는 범주적 구분과 둘 사이의 긴장 관계라는 관점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의미세계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 포착하고 역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기능적 맥락과 규범적 맥락의 구분은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논리의 분석적 구분에 상응한다. 사회변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체계통합과 사회통합 차원의 분석적 구분에 대한 록우드(Lockwood 1964; 1992)의 고전적 논의 이후,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은 하버마스(2006)나 기든스(Giddens 1984) 등 다양한 논자들에 따라 그 강조점과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Mouzelis 1997; Archer 1996). 애초 록우드(1964)는 사회변동을 체계의 변화로만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와 경제 체계의 변화로만 설명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체계통합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자들 사이의 질서 잡힌(orderly) 또는 갈등적인(conflictual) 관계의 차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봤다.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에 대한 록우드(1992)의 구분은 실제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관점주의에 따른 분석적 구분으로서, 각각 사실성(de facto)과 법·규범성(de jure)의 구분, 즉 인간 행

위를 규정하는 자원의 공리주의적 배분 및 통제와 관련한 비규범적 사실성 차원과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가치 및 규범적 질서의 차원의 구분에 상응한다(Mouzelis 1997).<sup>2)</sup> 전자가 체계나 구조 차원에서 작동하는 사물의 질서에 따른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과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행위자들의 문화적 가치 규범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계들의 통합과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두 개념은 분석적으로 상호 환원 불가능한 독립적인 두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2006)는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분석적 구분을 자신의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적용했는데, 그는 그 각각을 화폐와 권력 매체를 통해 조직되는 체계의 영역과 언어적 의사소통과 규범적 상호이해를 통해 조직되는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실체화시켰다.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을 실체적 구분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하버마스과 달리, 이 글에서는 그 둘을 묶우드가 애초에 제기했던 방법론적 관점주의의 측면에서의 구분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처럼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을 실체적 구분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 각 실체적 영역들 내에서 작동하는 체계통합 논리와 사회통합 논리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 영역을 체계통합이나 사회통합 어느 한쪽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체화하는 대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체계통합의 기능적 맥락과 사회통합의 규

---

2) 이는 또한 각각 마르크스주의나 기능주의 전통에서 강조점과 뒤르켐주의 사회학 전통에서의 강조점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Lockwood 1992).

범적 맥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드러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점주의적 이분법의 관점을 취할 것이다.

### 3.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이 제기되는 관심 맥락들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진술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를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구분해주는 핵심 원리들로 언급되고 있다. 이때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진술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관심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관심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를 제기하는 맥락이다. 이것은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나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연대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연대 속에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의 기초로 설명하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는 주로 각각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방편, 그러한 활동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조직 내부의 운영원리나 사회적 경제 실천의 규범적 원리로 파악되고 있었다.

인터뷰를 했던 6명의 활동가 모두 사회적 경제는 삶의 필요에서 출발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보육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육 문제가 국가의 정책으로 적절히 해결되

지 않거나, 주거문제가 시장의 경제논리나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해결 되지 않거나, 대기업화된 마트들로 인해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보고 싶은데 획일화된 상업영화가 지배하는 영화산업 구조로 인해 문화 향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당사자들이 공동의 필요를 중심으로 모이고 연대함으로써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할 때 당사자들의 당면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한 일정한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신경 쓰이는 조직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생활협동조합이 사실은 생활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하고 (사회를-인용자) 바뀌는 것이 생활협동조합의 원래 취지잖아요. 초창기에는 먹거리 위험성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세제, 샴푸, 치약,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생협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들이 요새 아동 학대하고 돈 빼들려가지고 탄 것하고 이런 위험한 것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에서 여전히 수입 농산물 먹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도 직접 필요하면 운영을 하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김수미)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김수미 씨는 “생활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하고 사회를 바꿔내는 것”을 생활협동조합 활동의 본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필요의 문제들을 당사자들이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하는 민주적 시민참여를 통해 일정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그로인해 이제 그녀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지자체, 공무원, 지역 자본 들에게 “많이 신경 쓰이는 조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진술에서 연대와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두 번째 관심 맥락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작동 방식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거나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다. ‘삶의 필요’라는 맥락에서 제기된 연대와 민주주의가 주로 삶의 필요 해결의 ‘기능적 방편’ 또는 그것의 해결을 위한 실천 과정의 ‘규범적 원리’ 양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연대와 민주주의는 기능적 맥락에 대한 고려보다는 주로 이상적 공동체 구성의 규범적(규제적) 원리로 고려된다.<sup>3)</sup> 사회적 경제

3) 일반적인 사회운동에서 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관심에서 제기되는 연대의 이념의 의미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개조하기 위한 비판과 저항의 전략적 수단(저항적 연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으로 사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 맥락에서도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운동의 경우 그것이 태생적으로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의 의제들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진술 속에서 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시장의 경쟁, 효율, 차가운 계산의 논리가 확대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을 행정적 관리와 동원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연대,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원리들을 침식하고 있다는 비판적 진단 속에서, 그러한 원리들의 복원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지역공동체경제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하고 있는 박태식 씨, 주거문제와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나진철 씨는 연대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오늘날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본주의 문  
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연관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들, 그러  
니까 경쟁사회가 되었고, 돈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그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 협동,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죠. …… 또 도심 속에서 아  
이들에 대한 보육, 교육, 또 노인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꼭 봤을 때는 도저  
히 한국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살만한 사회가 아닌, 〈응답하라 1988〉 때  
에는 ……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마을공동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 없었죠. 골목이 살아 있고, 관계가 살아 있고, 그러는

---

공장 가해자에 맞선 피해자들의 저항적 연대와 같은 전략적 기능으로서의 연대로  
나아가는 형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연대는 삶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의 기능적 연대로 서술되거  
나,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규제적 원리로 서술  
되는 경향이 있었다.



데 2016년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런 것들조차도 파괴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빈부격차도 커지고, 교육도 이게 뭐 완전히 경쟁,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고요. 일자리도 파괴되는 거고. ……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의 이유이기도 하죠. (박태식)

구청에서 예산으로 축제를 십억을 들여서 하면 주민들은 뭐 해요. 몇 명은 노래자랑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의자 깔고 앉아서 박수치고 이리잡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골목 축제를 했다. 자기네들이 5,000원씩 내고 토요일 날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 못 대게 자율협약을 통해서 하고, 프라이팬 가지고 나오고 식용유 가지고 나오고, 닭 한 마리 가지고 나오고, 부침개 가지고 나오고, 대문 열어서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 작품들 걸어놓고, 피아노도 치고, 뭐 이렇게 골목축제를 했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진철)

이와 같은 진술에서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경쟁사회”, “돈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로 인해 “인간의 중요성”, “협동”, “관계”, “골목”이 파괴된 시대로 비판된다.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축제를 예로 들면서 지역축제가 실제 진행되는 모습은 지자체가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논의에서 협동, 공동체, 관계, 골목 등이 표상하는 연대의 정신과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왜곡된 한국사회의 상황을 비판하는 규범적 정당성 근거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가들의 실천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규제적 이념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진술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는 크게 개인들의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관심 맥락과 현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관심 맥락에서 제기된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 속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의 범주적 성격 차이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충분히 통약 가능한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에서 ‘삶의 필요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공동의 연대의 실천 및 민주주의의 실천은 결국 이상적이거나 보다 나은 공동체 구성의 ‘규범적 또는 규제적 이념’으로서의 연대와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아감으로써, 시장의 자본논리와 국가의 권력논리를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맥락과 규범적 맥락 사이의 논리 필연적 연관이나 필연적으로 전자가 후자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sup>4)</sup> 그것은 우선 두 맥락이 서로 범주적으로 구분되는 질적으로 다른 관심과 작동논리를 가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맥락에서 특히 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됨으로써, 그것은 그 자체 목적이거나 규제적 방향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가능성

---

4) 이와 관련하여 Grubauer(1994)는 “연대는 가장 많이 신비화된 개념 중 하나인 동시에 이 개념을 필요로 하는 사회 집단이 반성하지 않고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고 지적한다(출처 2010에서 재인용).

이 크다. 후자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연대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당위적 목적이며 사회적 경제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규범적 이념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기능적 관심과 규범적 관심은 범주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들이 단순히 필요의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이상적 공동체 구성을 위한 규범적 이념으로까지 발전하여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경우 역시 삶의 필요에 대한 해결에서 시작된 연대와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의식이 확장되어 보다 넓은 사회문제에 대한 규범적 문제의식에 이르는 데까지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더구나 삶의 구체적인 필요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규범적 이념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

---

5) 일례로 김수미 씨는 주로 먹거리 문제에서 출발했던 생협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이 생태문제, 농촌경제문제, 지역의 여러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FTA, 광우병, 탈핵 및 대안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의제들로까지 관심이 확장되면서 단순히 먹거리와 관련한 필요에서 시작된 연대가 보다 넓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바꾸는 규범적 연대의 이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아름 씨는 공정영화의 공동체 상영 활동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에 참여하여 연대하는 활동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 외 다른 활동가들도 이와 유사하게 필요의 문제에서 출발한 연대와 민주주의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규범적 이념으로서의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발전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에 규범적 이념은 삶의 구체적 필요의 문제에 터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삶의 필요 문제에서 출발하기에 일차적으로 구조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체를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는 규범적 이념으로서의 연대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리적 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요소들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실천의 문제이다. 그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이라는 구분하에, 다음 장에서는 우선 삶의 필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포착된 연대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딜레마에 처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 4. 삶의 필요 해결 문제에서 제기된 연대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기능 맥락에 포섭될 가능성

##### 1) 연대의 문제

상술했듯이 삶의 필요의 해결이라는 문제들에서 연대는 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 방편으로 사고된다. 따라서 당장의 필요가 해소되거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연대는 소멸하거나 규범적 이념으로의 질적인 확장을 멈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서 삶의 필요라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서의 연대가 삶의 필요라는 문제에서 고려될 경우 규범적 연대의 이념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경제논리로 흡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난점들을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도 언급하고 있다. 김수미 씨는 생활협동조합은 어떤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보다도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 활동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내부에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을 잘 관리하고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지 왜 자꾸 새롭게 일을 벌이느냐, 이게 생협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항상 있다고 지적한다. 나진철 씨는 주로 사회적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 경제나 연대, 민주주의 등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단순히 정부지원금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승철 씨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내 사업을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협동조합을 수단화하여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며, 사회적 경제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가치나 연대나 네트워크보다는 내 경제적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동의 틀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삶의 필요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연대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역설들 중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가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게 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고 제 복지업무들을 시장화하거나 저비용으로 민간에 떠넘기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탈복지체제를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정당화하는 역할

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진철 씨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는 손 안대고 코 푸는” 상황이라고 정리한다. 사회적 경제가 국가의 복지 역할을 저비용으로 대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시대 복지의 변형을 정당화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이런 사회적 기업 운영 주체한테 돌려요. 뭔가 배분이 안 되고 그러면 거기를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자기네는 행정 부담 별로 없거든요. 자기는 총괄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 관리는 사회적 기업 조직들이 하고요. 그러면서 실업률 통계는 자기네들이 공공근로로 관리하거나 사회적 기업 육성해서 관리하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국가는 좋은 일 한다, 착한 경제 육성한다, 이런 명목까지 취할 수 있고요. (나진철)

이렇듯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가 삶의 필요라는 맥락에서 고려될 경우 규범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의념으로까지 확장되기보다는 경제적 필요 충족을 위한 기능적 수단화로 전락하거나, 신자유주의 시대 복지로부터 국가 역할의 후퇴를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정당화로 호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2) 민주주의의 문제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 역시 연대의 경우만큼이나 난처한 궁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김수미

씨는 “생활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의 필요를 위해 모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공성을 위해서 내가 좀 협동하면 사회가 바뀔 수 있는대라는” 인식까지 나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맞춰가면서 합의해가는 것, 함께 합의한 것을 집행하고 실행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 나진철 씨는 현대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 인용자) 민주주의와 연결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문제 해결이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밀접이 되어서 자본을 스스로, 웬만하면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경영하고 일하는 구조가 지역기반으로 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체가 몇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나 몇몇의 사회단체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 예를 들면 주택이 낡아 터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 사회주택 하는 조직 …… 그런 것 한번 해보자. ……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랬는데 하기로 했다. 그것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인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건설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목수, 미장 다 있더라.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발굴하는 과정 …… 그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 그런 게 근린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단

순히 투표해서 의원만 민주적으로 선출하자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사회 먹여 살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토  
론하고 참여하고……. (나진철)

앞서 인용한 두 활동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가 조직이나 지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 과정들로 그 개념적 외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가들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 전반의 문제들의 해결 원리까지 확대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는 삶의 필요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 토론, 합의라는, 조직이나 지역 ‘내부의 규범적 운영 원리’라는 측면에서 설명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의 민주주의를 생활 민주주의,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앞서 한 활동가가 표현한 대로 “근린 민주주의” 등으로 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정치라는 전문 영역에서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축인 정치 또는 정치 투쟁에 대한 고려가 생략된 채 진행되는 한, 그러한 생활 민주주의를 곧장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sup>6)</sup> 또한 포디

---

6) 김성윤(2013)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경제 논의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공백들 중 하나가 ‘정치’라는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라는 쟁점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자본의 동학에 근본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주환(2014; 2015)은 진보 진영의 사회적 기업 담론이



증체제에서 포스트포디즘 체제로의 전환이나 시민사회조직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이동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국가나 기업 조직 역시 나름의 민주적 조직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때 조직이나 지역 내부의 규범적 운영 원리라는 측면에서 협소하게 파악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의 규범적 우월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규정이며(장원봉 2007), 그러한 이유로 시장의 자본 논리와 국가의 권력 논리에 맞서 두 체계 논리에 대한 규범적 비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단순히 삶의 필요 해결과 관련된 조직이나 지역 내부의 규범적 운영원리라는 측면을 넘어서 시장의 자본 논리와 국가의 권력 논리를 견제·제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변혁할 수 있는 좀 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이념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활동가들의 인용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참여라는 차원을, 조직이나 지역 내부로 가두는 대신, 시장과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도성이라는 차원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을 단지 ‘민주주의의

---

국가와 보수진영의 지배 담론에 헤게모니적으로 포획된 채 대항 헤게모니 담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 담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사회적 기업의 담론과 실천은 신자유주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로 보는 관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삶의 필요 해결이나 조직 또는 지역 내부의 규범적 운영 원리라는 측면으로 축소된 민주주의는 의도와는 달리 이윤추구라는 시장의 자본 논리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들, 지역공동체들, 시민조직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권력의 논리에 도전하고 위협할 수 있는 급진성이 제거된 채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 논리와 권력 논리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듯 삶의 필요의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포착되는 연대와 민주주의의 관념 모두 그 의도와는 달리 전체 사회의 전반적 개조를 위한 규범적 원리로 확장되기보다는 체제 유지와 재생산의 기능 맥락 안으로 흡수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 장에서는 현 한국사회 비판과 대안적인 공동체 구성의 규범적 원리라는 맥락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처한 딜레마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5. 규범적 맥락에서 제기된 연대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신자유주의 통치의 기능 맥락에 포섭될 가능성

앞선 4장에서 삶의 필요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된 연대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조적으로 체제의 기능 논리 내부로 흡수·축소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이 장에서는 규범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연대와 민주주의 원리 역시 신자유주의 체계의 기능 논리 내부로 흡수·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받은 일군의 연구자들은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인 것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시장 논리로 사회나 공공영역의 연대 및 민주주의의 논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치의 목적을 위해 변형·재구조하여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Rose 1996; Shamir 2008; Lessenich 2011, Dahlstedr 2009; Hay 2003; 김주환 2012; 2016). 연대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변형하고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연대의 범주에 대가 없는 기부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실업자를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경유해서 이루어지는 연대만을 연대로 간주한다거나, 공동체나 이웃을 이해관계자 경영의 논리로 포착한다거나, 연대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한다거나, 민주주의를 선거 참여 횟수 등의 양적 기준으로 평면화함으로써 연대와 민주주의에 내포된 급진성과 저항성을 삭제하고 평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협소하고 평면적으로 파악된 연대와 민주주의의 실천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실천들이 통치 메커니즘 안에 포섭되도록 배치한다.

## 1) 연대의 문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연대가 신자유

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사회 구성의 규범적 원리로서 제기된다  
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신자유주의 통치의 기능 맥락 안에  
포섭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동즐로(1991; 2005)가 지적하듯이 역  
사적으로도 연대 또는 연대주의는 인민주권 원리에 따른 봉기와 계급투  
쟁이 야기했던 체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화주의적 지배의 틀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었다. 사실 빈곤과 실업 문제가 심화  
되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오  
늘날 신자유주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연대의 원리는 이들을 사회로 통합  
하여 체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전략적 도덕 자원이다.  
서영표(2015)가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김주환(2012)이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활동가들이나  
개인들이 나눔, 이웃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의식 같은 연대  
의 원리를 가지고 ‘국가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자원을 나누는  
실천을 수행한다면 연대의 원리는 신자유주의 통치를 위협하기는커녕  
그것을 강화하고 기능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대의  
이념이 그 자체 내에 규범성의 함의뿐만 아니라 계급, 성, 인종 간의 차  
이와 투쟁을 봉합하고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사회적 경제에서의 연대 정신은 의도하지 않게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들과 정치적 투쟁의 맥락들이 표면으로 노출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마르크스(Marx 1978, 57-58)  
가 프랑스 혁명의 3대 모토 중 하나로서 연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형제애(fraternity)에 대해 “계급관계의 상상적 폐지”, “계급 적대로부터

의 흠가분한 분리(dissociation)”, “모순적 계급이해들의 감상적 화해”, “계급투쟁의 공상적 극복”에 상응하는 표현이라고 혹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에서의 규범적 연대의 이념은 오늘날 복지로부터 국가의 후퇴를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투쟁과 적대라는 정치적인 것의 계기가 분출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일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장미영 씨는 활동가들이 “열악한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착한 일 한다는 것” 하나로 “희생이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고 말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조승철 씨도 “신자유주의”는 “복지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유용한 틀”이라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기에서 야기되는 갈등들”이 “연대라는 명분하에 일정 부분 덮여지고 가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 2) 민주주의의 문제

권위적 통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개인들, 시민조직들, 지역조직들의 자발적 참여를 복돋으면서 작동하는 헤게모니 체제라고 할 수 있다 (Dahlstedr 2009; 김주환 2012; 2016). 이는 흔히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 파트너십, 분할 통치 등의 표현으로 미화되지만,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에서 작동하는 그와 같은 협치, 파트너십, 분할 통치는 시민사회가 통치 메커니즘 안으로 흡수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저항성과 급진성이 제거되고 자신이 통치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통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Lessenich 2011). 그런 점에서 마치 신자유주의하에서 인적자본, 자기계발 등의 담론과 실천 속에서 자유의 이념이 신자유주의 통치 메커니즘 내부로 흡수되었던 것처럼(서동진, 2009), 사회적 경제에서 강조되는 시민과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 역시 애초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통치 내부로 흡수되어 신자유주의 통치의 기능적 보완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박태식 씨는 흔히 사회적 경제에서 전개되는 시민조직의 참여 과정을 협치, 파트너십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조직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사회적 경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오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공모사업” 위주로 전개되는 한, 그것은 진정한 협치일 수 없다고 말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조승철 씨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등장 과정을 “기층에서 진행되는 운동들이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국가정책으로 “흡수”, “포섭”, 또는 “투항”해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원인을 “결국 힘 관계에서 헤게모니를 빼앗긴 것”에 있다고 진단한다. 대항 헤게모니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기층 운동 조직들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국가 정

책 과정에의 참여가 결국 참여와 민주주의가 지닌 급진성과 저항성을 잃고 체제 내화해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 6. 기능 맥락으로 흡수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규범적 맥락 복원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회적 경제의 담론과 실천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는 그것들의 규범적 맥락이 탈각된 채 체제의 기능 맥락 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기능 맥락 안으로 흡수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규범적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실천이 더 나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대안으로 사고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은 무엇일지 논의해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전략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활동가들의 언어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했을 때,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규범적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체제의 기능적 보완물이 되는 것을 넘어 서기 위한 고민들은 크게 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배담론이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도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는 것을 경계하면서, 복지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탈복지국가시대 복지를 민간이나 사회에 떠넘기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도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경제나 정치 영역과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사회적 경제 내부의 협소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영역과의 접합적 실천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미 규정에 대한 저항

인터뷰 대상 6명 중 4명의 진술 속에서, 국가가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나 국가가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의미 규정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언급되고 있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주관 정부 부서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된 영리전략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사회적 경제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회서비스제공, 협동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미 씨는 국



가가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 개념에 한정될 때 “결국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는 사라지고 경제만 남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1800년대 애초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질 때”의 가치와 철학인 “가진 자들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인간다운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수미 씨의 진술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리전략이나 경제활동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의 의도와 달리, 사회적 경제를 인간적인 삶의 실현이라는 포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태식 씨는 인터뷰 내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대신 ‘공동체 경제’나 ‘지역운동’이라는 용어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즘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수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한계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중심이에요. 그 말은 공급자 중심이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취약 계층을 누가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 경제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다양한 공동체의 주체들……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이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사람들까지 주체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박태식)

위의 인용에서처럼 박태식 씨는 공급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넘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주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대안적 활동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일자리, 사회서비스의 필요 충족, 조합원의 권익 향상 같은 단지 다양한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정향되어 있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넘어서 운동성을 강화하고 보다 넓은 사회적 개조의 지평 안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승철 씨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로서 최근 자신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조직들의 네트워크 만들기 작업을 “헤게모니 투쟁”의 관점에서 진보적 사회변화의 “진지”이자 “역량 강화 전략”으로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활동을 정의하고 있었다. 나진철 씨는 국가의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활동가들은 국가가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넘어 보다 포괄적으로 두 용어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었고,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과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성의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의 호명 권한에 도전하는 것으로, 체제의 기능적 보충물로 사회적 기업을 흡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통치 및 기능적 관심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복지 영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저항

두 번째, 탈복지국가시대 복지를 사회적 경제에 떠넘기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대한 저항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장미영 씨는 사회적 경제가 모든 것을 포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단지 “복지로 풀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외는 기본적으로 “복지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나진철 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와 국가의 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구분 하면서,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국가는 “중부담 중복지” 수준에서 복지를 담당해야 하고, 그 전제하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승철 씨는 “당사자들이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조직하고 관련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을 대신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태식 씨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시민일반에 대한 보편적 복지나 보편적 권익 보장 정책을 행정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를 시민조직들과의 협동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진해간다는 점에서 민과 관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반면, 박원순 시장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자체의 행정능력으로 풀어야 할 것들마저도 시민조직들을 동원해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박원순 시장의 행정 능력과 철학의 부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민관의 관계도 아니라

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활동가들의 진술은 비록 오늘날 국가는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복지로부터 스스로를 후퇴시키면서 복지를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민간과 시민조직들에 전가하고자 하는 구조적 경향을 보이며 작동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이러한 경향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사회적 경제와 정치 투쟁의 접합

세 번째, 사회적 경제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의 접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활동가들 모두 그와 같은 실천들의 접합의 당위성을 말하고는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온도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운동보다는 27여 년간 생활협동조합에 집중해 왔던 김수미 씨와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 활동가이고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경험이 적은 이아름 씨의 경우 정치적 실천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실천들에 대해 일정한 회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장미영 씨의 경우는 다년간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진보정당들의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노력이 이룬 성과가 별로 없다고 말하면서, 앞의 두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과의 접합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나머지 세 명의 활동가들은 정치적 실천 영역과의 결합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박태식 씨는 현재 자신이 하

고 있는 마을네트워크 조직이나 공동체 경제 활동을 “좀 더 급진적인 정치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이유를 지역의 의제나 운동을 단지 지역 내부의 협소한 문제로 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전국화하고 정책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운동과의 결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지만 그는 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결정 권한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져오고, 관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업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승철 씨는 인터뷰 내내 사회적 경제 활동과 정치투쟁 맥락과의 결합을 특히 강조했다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저는 그 자체로는 독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경제는 스스로 완결적이지 않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 당사자들이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인용자) 만들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저는 국가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하게끔 요구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 저의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 고민입니다. 지배자들 또는 자본은 자기의 본질적인 이해를 침해하지 않으면 자기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조차도 포섭하고 끌어안고 감으로써 동의는 되지 않더라도 이 바운더리 안에 끌어들여 자기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확장시켜가고 자기 하부구조화 해버리는데, 그럼 반대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는 그런 헤게모니 전략이 있느냐 하면 없는 거예요. (조승철)

조승철 씨는 사회적 경제는 “그 자체로는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활동은 필수적으로 정치운동과 결합되어야 하고 정치운동으로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승철 씨의 진술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그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힘 관계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국가의 관계를 힘과 힘의 대결로 파악하며, 전자가 후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자는 “정치세력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을 시장이나 국가에 맞서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한 역량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현재 자신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동가 및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성 작업을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에서의 진지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들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경제나 정치 영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으로 보고 자신들의 활동을 그 안에 가두는 것만은 아니라

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정치 투쟁과 결합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천들을 근본적으로 정치 투쟁의 지형 위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김성윤(2013)이 우려했던 사회적 경제 담론에서 정치라는 쟁점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우려는 최소한 활동가들의 진술에 한정해서 볼 때 어찌면 기우일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 6장에서 주목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에서 포착되는 위 세 가지 측면들은 사회적 경제에서의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을 체제 내부의 기능 맥락으로 환원시켜 사회적 경제를 단순한 체제 유지와 재생산의 기능적 보완물로 배치하고자 하는 국가나 신자유주의 통치의 의도가 실패하고 있는 지점들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들은 국가나 신자유주의 통치의 의도에 저항하고 그럼으로써 연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보다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7.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규범 맥락과 기능 맥락의 범주적 구분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의 핵심 원리인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적 맥락에만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자명하게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려는 관점과, 연대와 민주주의의 기능 맥락에만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신자유주의의

기능적 보완물로 보려는 비판론 양자를 지양하고자 했다.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가 어떻게 굴절되고 또 복원될 수 있을지를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언어적 의미 세계는 활동가마다 다른 관점과 강조들을 통해 조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활동가 개인의 의미 세계도 자체 모순적이고 비일관되게 구성되는 등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소한 활동가들의 의미세계와 구체적인 실천에 주목할 경우 지금의 사회적 경제를 자명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아 손쉽게 그 가능성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생산적인 관점은 사회적 경제에 결부되고 있는 여러 담론들의 경합, 여기에 작용하는 힘 관계와 구조적 요인들,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의미망의 뒤얽힘에 주목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복잡한 요소들의 역동적 관계들을 해석하는 것이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이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는 의도와 달리 구조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탈복지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보완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단지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가진 신비화의 힘에 취해 그것들의 규범적 맥락만을 보고 그것들이 지닌 기능적 맥락과 구조적으로 기능 맥락화될 위험에 주목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찬양으



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 체계의 기능 맥락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그렇다고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활동가들의 의미 세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 맥락을 국가나 신자유주의 통치 체제의 기능 맥락으로 흡수·환원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러한 경향에 저항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국가의 규정에 저항하고, 복지 영역을 사회적 경제에 떠넘겨 복지 영역을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재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저항하며,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정치투쟁의 영역과 접합하고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헤게모니 강화를 통해 국가의 권력 논리와 시장의 자본 논리를 연대와 민주주의의 원리로 재조직하고자 하는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탈복지체제의 기능적 보완물로 전락할지, 나름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규범적 맥락을 거세하고 기능 맥락 안으로 환원하려는 체계의 논리와 이에 맞서 그것들의 규범적 맥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조직들 사이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조직들은 자신들의 실천을 사회적 경제라는 협소한 영역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정치운동과 결합시켜야 하고, 힘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정치적인 것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7)</sup>

## 참고문헌

- 김성구. 2013.6/30. “뉴라이트로부터 안철수까지, 사회적 시장경제가 뭐기에.” 『미디어 오늘』.
- 김성윤. 2013.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 『문화/과학』 73. 110-128.
- \_\_\_\_\_. 2011.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진보평론』 48. 188-206.
- 김주환. 2016.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0. 164-200.
- \_\_\_\_\_. 2015. “사회적기업과 젠더 담론의 정치동학.” 『문화와 사회』 18. 329-380.
- \_\_\_\_\_. 2014.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문화와 사회』 16. 223-274.
- \_\_\_\_\_.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6. 210-251.
- 고용노동부. 2010. “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연구II.”

---

7)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실천 방향을 서영표(2015)는 공동체적 신자유주의 상황에서의 ‘적대가 없는 연대’에서 ‘적대를 통한 연대’로의 전화라고 부른다.

- 노동부. 2005.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기업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 동즐료, 자크.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 주형일 역. 동문선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 서영표. 2015. “저항적 연대와 사회변혁: 적대 없는 연대에서 적대를 통한 연대로.” 『로컬리티 인문학』 14. 123-161.
- \_\_\_\_\_. 2013. “인식되지 않은 조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노골적인 계급사회의 탈계급 정치.” 『진보평론』 58. 62~85.
- 스티글리츠, 조지프. 2013. 『불평등의 대가』. 이순희 역. 서울: 열린책들.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 임혁백·김운태·김철주·박찬웅·고형면. 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모색』. 서울: 송정문화사.
- 이문국. 2009. 『자활사업 15주년 기념백서: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자활정책연구소.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5-34.
- 참여정부. 2006. “비전2030 최종보고서.”
- 츨, 라이너(Rainer Zoll). 2008.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연대의 역사적 기원, 변천, 그리고 전망』. 최성환 역. 한울.
- 하버마스, 위르겐. 2006. 『의사소통행위론 2』. 장춘익 역. 서울: 나남.
- 한형식. 2013/1/16. “협동조합은 진보적인가?” 『참세상』.
- Archer, Margaret. 1996. “Social Integraton and System Integration: Deve-

- loping the Distinction.” *Sociology*, 30(4). 679-699.
- Dahlstedt, Magnus. 2009. “The Partnering Society: Governmentality, Partnerships and Active Local Citizenship.” *The Open Urban Studies Journal*, 2, 18-27.
- Donzelot, Jacques. 1991. “The Mobilization of Society.”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Graham Burchell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9-179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Grubauer, Franz. 1994. *Das Zerrissene Bewusstsein der gesellschaftlichen Subjektivität*. Munster.
- Hay, James. 2003. “Unaided Virtues: The (Neo)Liberalization of the Domestic Sphere and the New Architecture of Community.” *Foucault, Cultural Studies, and Governmentality*. Jack Bratich et al. ed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65-206.
- Lessenich, Stephan. 2011. “Constructing the Socialized Self: Mobility and Control in the Active Society.” *Governmentalit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 Thomas Lemke ed. New York: Routledge. 304-320.
- Lockwood, Davi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G. K. Zollschan and W. Hirsch eds. London: Routledge.
- \_\_\_\_\_. 1992. *Solidarity and Schism: ‘The Problem of Disorder’ in Durkheimian and Marxist Soci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978. “The Class Struggles in France, 1848 to 1850.” *Karl Marx*

- and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Jack Cohen et al, eds.  
Moscow: Progress Publishers, 45-145.
- Mouzelis, Nicos. 1997. "Social and System Integration: Lockwood, Habermas, Giddens." *Sociology*, 31(1). 111-119.
- Shamir, Ronen. 2008. "The Age of Responsiblization: on Market-embedded Morality." *Economy and Society*, 37(1). 1-19.
- Rose, Nikolas.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327-356.

## Abstract

# The Dynamics Between Functional System Logic and Normative Logic in South Korean Social Economy

Kim, Joohwan

Dongguk University

Solidarity and democracy are the core values that the social economy is aiming for. However, they are practiced in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functional logic and normative one associated with the practices for achieving the both valu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se tensions and conflicts by exploring social economy activists' understanding of solidarity and democracy. Six social economy activists were interviewed in June, 2016.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On the one hand, normative aspects of solidarity and democracy, which are understood by the activists, are at higher risk of being captured into the functional system logic in the era of neoliberalism or post-welfare state. In this sense, the values of solidarity and democracy in social economy are likely to be deployed as functional supplements for the government's management of risks derived from growing economic inequality and the welfare budget-cut. On the other hand, activists continuously resist to this tendency in order to rehabilitate normative dimension of social economy. They challenge the government's definitions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and redefine these terms with emphasizing their normative and critical dimensions; they resist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pass its' traditional responsibility for welfare onto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y continuously try to combine their practices with broader

political struggl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social economy is a kind of battlefield in which the functional system logic of the state power and the logic of normative resistance to it compete and struggle with each other. In this sens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se dynamic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se two logics operating in the practices of social economy, beyond both presumed optimism and pessimism about the practices of social economy in achieving resistant solidarity and democracy.

■ **Keyword:** Social Economy, Solidarity, Democracy, Normative Criticism, Function

투고 : 2016/9/30    심사 : 2016/10/10    확정 : 2016/11/9